

성별영향평가제도 개선 방안

수행과제명 :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Ⅲ): 성 주류화 실행모델 개발

과제책임자 : 김경희 연구위원

Tel: 02-3156-7187, e-mail: kh99kim@kwidimail.re.kr

요 약

성별영향평가는 성 주류화의 핵심도구로 국내에서는 성인지 예산, 성별통계와 함께 법적 근거를 갖고 운영되고 있음. 성별영향평가는 2004년 시범분석 이후 참여하는 기관과 대상 과제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개선을 위해 법적 근거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성 주류화는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채택한 주요 전략의 하나로, 정책과 예산에 성 차이를 고려한 성 인지 관점을 통합하는 것임. UN과 EU가 성 주류화를 지난 10년간 성 평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한 이후 성 주류화 관련 제도는 빠르게 확산되었음. 이 정책은 외국에서 사회정책에 통합된 도구로 실행되었고, 거버넌스의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었음. 국내에서는 성 주류화를 위한 도구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별통계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특히 성별영향평가는 성 주류화의 핵심도구로 2002년에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근거 규정이 만들어졌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참여하면서 대상과제가 크게 증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환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성 주류화의 실행주체인 공무원과 전문가, NGO 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법 제·개정과 성 주류화 실행모델이 개발되어야 함

2. 정책의 추진방향

□ 성 주류화가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관료, 전문가, NGO 활동가가 실행주체가 되는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등 성 주류화 관련조항이 법제화된 이후 공무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전문가의 역할은 강조되고 있는 반면, NGO 활동가들이 소외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성 주류화가 한국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일반정책이 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반영하여 집행되도록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NGO 활동가의 참여가 필수적임
- 이를 위해서는 「여성발전기본법」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법」(가칭)에 관련 규정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예를 들면 여성부 장관은 성 주류화 관련제도를 위한 연구회 또는 T/F팀을 지원하도록 하고 해당기구에는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있음

□ 성 주류화 실행주체 네트워크 운영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1단계 ‘성 주류화 실행주체 구성’에서는 실행주체 네트워크 구성형태를 삼각연대 기본형으로 할 것인지, 확장형으로 할 것인지를 논의해서 결정함. 성 주류화 전문가가 성 주류화 T/F팀을 구성하고 일차적으로 분석대상사업을 여성부서 공무원, NGO와 의논하여 결정함
- 2단계 ‘대상정책에 대한 성 인지적 문제 파악’에서는 실행주체들이 성

주류화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낮다면 사전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3단계 '성 주류화 실행과정에 대한 조사·관찰·기록'단계에서는 실행 주체들의 성 주류화 인식, 경험, 태도와 그것의 변화에 대해서 조사, 관찰, 기록함
- 4단계 '성 주류화 실행과정에 대한 반성, 성찰'에서는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의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등의 기회를 줌
- 5단계 '성 인지적 정책개선 대안 마련 및 환류'에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파악한 대상정책의 문제 또는 이슈들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참여자들 스스로가 집단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마련함

□ 한국 성 주류화의 주요 도구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별통계, 성인지 교육이고, 여성부가 성별영향평가, 성별통계, 성인지 교육을 담당하고 기획재정부가 성인지 예산을 담당하고 있음. 하지만 성 주류화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시된 개선방안 중 법령이나 지침 등을 개정하거나 변경하도록 주도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성별영향평가 관련 규정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명시되어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정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정책환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성별영향평가 담당공무원의 책무성을 높이고 환류실적을 높여 이 제도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가칭)을 제정하거나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할 것임. 특히 정책환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책환류를 위한 계획서 작성, 정책환류 실적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정책환류 담당자지정, 정책환류 담당자 교육 등의 관련 규정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 현재 여성부의 성 주류화 관련업무는 성별영향평가과가 담당하고 있는데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크게 부족함. 성별영향평가 참여기관과 대상과제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성인지 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인력이 보강되어야 함. 또한 여성정책조정회의의 주요 기능의 하나로 성별영향평가의 정책환류에 대한 실적 점검사항을 두고,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가 보다 긴밀하게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3. 정책효과

- 한국의 성 주류화 정책은 법률에 근거하여 실행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괄목할 만한 수준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3년간 성 주류화와 성인지 예산을 주제로 각종 국제심지엄과 회의를 개최하여 유럽국가 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성 주류화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음. 더욱이 한국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원조 공여국으로서 그동안 개발해 온 성 주류화 제도운영의 경험이 활용되거나 국제적으로 홍보될 가능성이 높음. 국제적인 환경변화를 고려해 볼 때,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여성부가 협력하여 한국의 성 주류화 제도를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성 주류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할 경우 성 주류화 제도의 정착을 위한 국내외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임. 특히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일반정책이 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반영하고 성 평등을 향상시키면서 정책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임